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6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텔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리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①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⑦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⑤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 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은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⑧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①, ②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①: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②: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③: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④: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⑤: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⑦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⑦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⑦를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⑦에 해당한다.
- ⑤ ⑦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⑧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